

대정부·대국회「로비」를 강화하자

축산관련단체·업계의 적극적인 대국회·대정부 「로비」활동과 축산단체를 형성하고 있는 생산자들의 「로비」의 필요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요망되고 있다.

로비(lobby)란 대합실 복도·현관·응접실 등을 겸한 넓은 방을 말하는데, 이제는 국회의사당의 의원 휴게실에 출입하면서 국회의원들에게 진정·탄원 등 입법활동이나 정책결정에 압력을 가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통용되게 되었다. 미국은 1946년 법률로 공인되어 로비스트(lobbyist)들이 등록하고 정당이나 국회와 원외 이익단체들과의 중간역할을 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는 입법활동까지도 대부분 행정부 주도이었기 때문에, 또한 권력이 행정부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의회 로비가 아닌 행정부 로비가 필요하였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진리와 같이 권력과의 로비란 단어가 금품의 전수 등으로 이해되어져 잘못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13대 국회에서 4당 체제로 절묘한 황금의 의석배분으로 이제 우리도 대의회 로비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를 느끼게 되었고, 또한 소선거구제 실시로 대부분 비전문가이고 초선의원이 많이 의회에 진출함으로써 로비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느 집단의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의원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말은 그 산업의 몰락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작년도 정기국회에서 다루어진 배합사료의 부가세 영세율 적용 문제만 보아도 로비가 왜 필요한지 금방 알 수 있다.

현대사회는 과거의 농경사회와 달리 다양화된 이익집단이 얼키고 설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여 살고 있다.

물론 국가는 구성원들을 위해 일정한 목표를 세우고 각 부문의 균형 발전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우선순위를 두어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국가가 어느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인가를 판단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며, 또 국가 혼자서 마음대로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는 정책을 결정할 때 사회의 각 구성원인 이익집단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고 의견을 들으며 정책을 조정하게 된다. 바로 이 과정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로비」가 필요한 것이다. 또 이 과정에서 우리 속담에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있듯이, 우는 사람에게 떡 하나를 더 줄 수도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가가 10개 집단의 이익이 걸려 있는 부가세를 10품목중 한 품목에 한해서만 면제해 준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 국가는 나름대로 자료를 준비하고 관련단체와 대화를 나눠 어느 것이 가장 합당한 것인가를 판단하게 된다. 이때 A단체가 A품목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다른 B, C……J품목보다 부가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합당한 자료를 제시하고 정부 관계자와 국회의원을 설득할 때와, 그냥 가만히 감나무 밑에 앉아서 정부가 또는 국회가 감을 떨어뜨려 주기만을 바랄 때와는 어떤 차이가 있겠는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전자가 채택될 확률이 높다.

우리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다루어진 농약·농기계·비료·배합사료에 대한 영세율 적용문제에서 이

와같은 것을 목격했다. 그동안 배합사료에 대한 부가세 면제 문제는 전양축가들의 최대 관심사이자 축정의 쟁점이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배합사료에 대해서는 지역축협 사료에 대해서만 2년간 부가세 영세율 적용이 연장되었을 뿐이다. 87.5%에 해당하는 축협중앙회와 민간사료업체에서 생산하는 양축가는 계속 10%의 부가세를 부담해야 한다. 연간 9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오히려 축산물이 수입되고 있는데 국내 축산업자가 사용하는 생산원자재(축사·사료·약품·기계 기구 등)에 10%의 세금을 부가한다는 것은 국내 축산농민의 설자리가 없어진다는 절박한 현실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것이다.

배합사료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이 제외된 가장 큰 이유가 기업목장도 영세농민이냐는 이론에 부딪혀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들린다.

그러나 농약·농기계를 사용하는 농민들은 모두 영세농민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이들 농민들도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축가와 별로 다를 바 없다. 262,044호의 양돈농가중 300두 이상 키우는 전기업농가는 2,429호로 전체의 0.9%에 지나지 않는다. 0.9%의 전기업농들 때문에 99.1%의 영세양돈농가가 부가세를 부담하는 꼴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로비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만약 소·돼지·닭을 사육하는 양축가와 양축가단체, 또 이들에게 원료를 공급하는 사료·동물약품·기자재업체가 13대 국회 개원 후부터라도 배합사료 부가세 면제의 당위성을 국회 재무·농림수산위원회와 경제기획원·재무부 담당관에게 역설하고 꾸준히 설득해 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또, 이 문제는 양축가들만의 문제인가? 물론 배합사료의 부가세를 부담하는 측은 양축가다. 그러나 양축가가 생산원가가 높아 도산을 하고 대신 외국에서

고기를 수입한다면, 양축가들에게 사료와 동물약품·기자재 등을 공급하는 관련업체에는 타격이 없을까?

지금까지 본회를 비롯한 생산자단체들은 나름대로 또는 공동으로 건의서도 내고 로비활동도 활발히 벌여왔다. 그러나 로비활동에는 당연히 인력과 시간과 돈이 필요하다. 밖에서 생산자단체에서 요구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생산자단체 집행부에서만 로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전담하기엔 역부족이다. 물론 자료를 만들고 시간을 할애해 로비대상을 만나 설명·설득하는 것은 당연히 생산자단체 집행부에서 맡아야 한다. 그러나 그들이 나가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뒤를 받쳐주는 것은 생산자단체를 형성하고 있는 개개 회원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지금까지 발로 뛰는 집행부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시대는 지났다.

따라서 새해엔 전양축가들이 로비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최소한 간접적으로도 모두 동참해야 한다. 그리고 어떤 사안에 있어서 축산업계 공동의 이익이 걸린 문제는 축산관련단체와 업계가 연합전선을 펴서 공동대처하는 유대감을 보여야 한다.

때늦게 뒷북을 친 격이 되고 말았지만, 지난해 12월에 본회를 비롯한 낙농육우협회·양계협회 등 양축가단체와 사료를 공급하는 사료협회가 공동으로 각 일간지에 「150만 양축농민의 호소문」을 게재해 배합사료에 대한 부가세 면제와 국산옥수수의 배합사료 원료배정철회를 요구한 것은 「야복, 뒷북」을 떠나 일단은 고무적인 현상이라 볼 수 있다. 양축가단체와 관련단체가 한배를 탔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공동으로 대처한 좋은 선례가 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년에는 전양축가와 관련업체가 공동이익을 위해 손발을 맞춰 같이 뛰는 해가 되길 바란다.

'89년 새해는 과거의 타성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활동을 해야 할 중요한 해가 아닐 수 없다.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선 '89년을 우리가 이 벽을 넘을 때 새로운 도약이 있을 것이다. **■**